

4/ 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김성조



세대 간 견해의 차이와 잠재된 갈등

출처: <https://whatjapanthinks.com/2010/08/05/generation-gap-in-japan/>

김성조(金城兆)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고려대에서 역사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영국 워릭대학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 후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의 정당정치와 여론의 변화가 복지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21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본 일본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과 정당 구도”, “Distorted Policy Transfer and Institutional Conflicts: The Health Insurance Reform in South Korea”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3.28.118>

1. 들어가며

비교복지국가 연구에서 학자들은 연령구조와 복지지출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¹ 중위투표자 이론에서는 유권자 중 노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령인구에 편향된 복지정책이 산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² 즉, 중위투표자 이론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중위투표자가 점차 고령자 측으로 기울어지면서 고령자의 정치적 힘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령인구는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복지수급자로서 노인층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는 젊은 세대보다 균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의 근거로 이해되었다.³

이러한 논의는 일본에서 소위 '실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은 연금과 의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혜택이 고령자에 편중되어 있었고 아동이나 실업 영역에 해당되는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 속도는 더디었다.⁴ 최근 들어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인해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 고령자 복지국가의 편향성과 관련하여 연령별로

1 Julia Lynch, *Age in the Welfare State: The Origins of Social Spending on Pensioners, Workers and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M. Busemeyer, A. Goerres, and S. Weschle,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ve Spending in an Era of Demographic Ageing: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Income in 14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2009; Markus Tepe and Pieter Vanhuysse, "Elderly Bias, New Social Risks, and Social Spending: Change and Timing in Eight Programs across Four Worlds of Welfare 1980~2003,"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3), 2010; Pieter Vanhuysse and A. Goerres, eds, *Ageing Populations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Studies of Policies and Politics*, Abingdon: Routledge, 2012; Patricia Boling, *The Politics of Work-Family Policies: Comparing Japa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2 Torsten Persson and Guido Tabellini, *Political Economic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3 Achim Goerre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Ageing Europ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9; Laurie A. Rhodebeck, "The Politics of Greed? Political Preferenc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Politics* 55(2), pp. 342~364, 1993.

4 오사와 마리, 김영 옮김,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 후마니타스, 2009; 埋橋孝文, 『福祉政策の国際動向と日本の選択: ポスト「三つの世界」論』, 法律文化社, 2011;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옮김, 『복지정치: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논형, 2011.

복지 영역의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은 서구 복지국가 연구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를 통해 소위 ‘실버 민주주의’(Silver Democracy)의 논리적이고 미시적 논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 간 복지 균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실버 민주주의론

복지수혜와 부담의 불균형에 대한 일본 내 논의 중 ‘실버 민주주의론’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⁵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노인층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복지 및 조세 선호가 청년층에 비해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며 이를 ‘실버 민주주의’라 부른다. 정치인들은 중위투표자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데 유권자 내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에 고령자에 유리하게 설정된 복지 및 재정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개혁은 더욱 곤란해진다.

〈표 1〉과 같이 이현출은 경제활동 참가와 정치적 대표권을 기반으로 세대구분을 시도하였다.⁶ 제I영역은 투표권도 있으며, 생산력도 있는 계층이며 II영역은 생산력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15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세대를 의미한다. III영역은 투표권도 없고 생산력도 없는 15세 미만의 영유아 및 아동 등 소위 미래세대를 지칭한다. IV영역은 투표권은 있으나 현역에서 은퇴하여 생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노인층 혹은 은퇴세대를 지칭한다. 이들 세대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에는 참가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납

5 八代尚宏, 『シルバー民主主義: 高齢者優遇をどう克服するか』, 中央公論新社, 2016.

6 이현출, 「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간 정의」,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2018.

〈표 1〉 투표권과 생산력에 따른 세대 구분

		투표권	
		무	유
생산력	유	II(생산예비세대)	I(생산세대)
	무	III(미래세대)	IV(고령세대)

출처: 이현출, 「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간 정의」,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2018, 92쪽.

부하지 않으면서 투표권은 행사하므로 사회적 재화의 분배과정에는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권자 내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배경으로 부담과 수익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⁷ 투표가능 연령 인구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1969년 15.8%에서 2017년에는 42%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고령자의 투표율은 젊은 층보다 높은 편으로 세대 간 투표 수의 차이는 더욱 심화된다. 총무성이 지난 2021년 중의원선거에 대한 연령별 투표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30.1%, 30대는 40.5%에 머무르지만 60대는 65.8%, 70대는 67.9%에 달한다.⁸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인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쉬워 노령층의 선호가 반영되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위 ‘실버 민주주의’현상의 등장과 함께 여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사회보장 분야에서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둘러싸고 이러한 세대 간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⁹ 우선, 고령자들은 연금과 의료 등 자신들에게 집중된 기존의 복지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한다.¹⁰ 그러나 젊은 층은 교육, 아

7 衛藤幹子, 「高齢化の政治」, 新川敏光 編, 『日本・韓国: 世界政治叢書』, ミネルヴァ書房, 2008.

8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hugiin49/index.html (최종 검색일: 2022. 11. 25.).

9 Markus Tepe and Pieter Vanhuyse, “Are Aging OECD Welfare States on the Path to Gerontocracy?,” *Journal of Public Policy* 29(1), 2009; Clara Sabbagh and Pieter Vanhuyse, “Intergenerational Justice Perceptions and the Role of Welfare Regim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Administration & Society* 42(6), 2011.

10 八代尚宏・島澤諭・豊田奈穂, 『社会保障制度を通じた世代間利害対立の克服: シルバー民主主義を超えて』, NIRA モノグラフシリーズ, 2012.

동·보육, 실업수당, 직업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¹¹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논리를 따르게 되므로 고령자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의견이 더욱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러한 세대 간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 차이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수익자와 부담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세대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집단이며 반대로 근로세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다. 즉, 대부분의 사회정책은 근로세대의 세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 유지되지만,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수익자는 퇴직세대다. 또한 복지감축 시대에는 근로세대가 자신들은 이전 세대를 위해 지불한 비용에 비해 크게 적은 복지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퇴직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복지개혁에 대해서도 세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령세대는 상대적으로 예상 생존 기간이 짧으므로 정치경제적 개혁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보다 근시안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다.¹² 당장의 복지 혜택을 수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고통스러운 개혁을 지지하여 고통을 분담할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정책결정자 역시 유권자의 다수파가 되고 있는 고령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스러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이를 뒷 세대로 미루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널리 목격되고 있다. 린치(Lynch)는 복지 급부가 비(非)고령자에게 배분되는 비중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복지 혜택의 비율(Elderly/non-elderly spending ratio)을 조사하였는데 일본은

11 Markus Tepe and Pieter Vanhuysse, "Elderly Bias, New Social Risks, and Social Spending: Change and Timing in Eight Programs across Four Worlds of Welfare."

12 島澤諭, 「消費増税に反対するのは誰か?: シルバーデモクラシー論を超えて」, *PHP Policy Review* 12(76), 2018.

42.3으로 선진민주주의 20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¹³ 테페(Tepe) 등의 연구에서도 21개의 성숙한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젊은 층을 위한 복지지출 대비 고령자를 위한 복지지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비해 1990년대 후반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다.¹⁴ 페테르센(Pettersen)은 노르웨이에서 여러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¹⁵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아동수당이나 학교교육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키첼트(Kitschelt)와 램(Rehm)은 국가 대상을 확대하여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⁶ 고령자일수록 교육 지출 확대에 부정적이었지만 실업 급여에는 우호적이었고 의료 부분에서는 연령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세마이어(Busemeyer) 외 역시 OECD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의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복지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¹⁷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 지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으며 반대로 연금에 대한 지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와 실업의 경우 연령에 의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일본에서도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고령화율이 높은 도도부현일수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복지비의 비중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¹⁸

그렇지만 ‘실버 민주주의론’ 역시 근로 혹은 현역세대와 은퇴세대 간의

13 Julia Lynch, *Age in the Welfare State: The Origins of Social Spending on Pensioners, Workers and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30.

14 Markus Tepe and Pieter Vanhuysse, "Elderly Bias, New Social Risks, and Social Spending: Change and Timing in Eight Programs across Four Worlds of Welfare 1980~2003."

15 Per A. Pettersen,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1), 2001.

16 Herbert Kitschelt and Philipp Rehm, "New Social Risk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K. Armingeon and G. Bonoli,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London: Routledge, 2006.

17 M. Busemeyer, A. Goerres, and S. Weschle,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ve Spending in an Era of Demographic Ageing: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Income in 14 OECD Countries."

18 八代尚宏・島澤諭・豊田奈穂, 『社会保障制度を通じた世代間利害対立の克服: シルバー民主主義を超えて』.

대립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복지 조세에 대한 사회균열 중 가장 강한 균열은 여전히 계급에 의한 구별이므로 연령 및 세대 갈등을 중심에 놓는 논의는 계급갈등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연령 간 선호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언제나 사회 내에 다양한 잠재화된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치적 균열의 형태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합을 위한 연대감 및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봉합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세대에 따라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역세대 대 은퇴세대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는 일본의 소비세 증세 지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예상과 다르게 50대와 60대가 소비세 증세를 지지하고 오히려 20대는 70대와 함께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하였다.¹⁹ 이처럼 세대 간 갈등이 반드시 단순한 청년 대 노년의 이분법적 대립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2) 연구가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복지정책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나 사회적 계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육, 실업, 의료, 연금 등 주요 4개 복지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별 선호도를 연령적으로 추론하여 보고 이를 사회적 계급 등 다른 변수의 영향과 구별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고령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연금과 의료이며 상대적으로 교육과 실업은 근로세대나 젊은 층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진행해 보면 연금과 같은 경우 납부액과 급여액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급부를 납부하는 자와 수급하는 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19 김성조, 「일본 소비세 인상과 세대, 계층의 정치경제: 실버 민주주의론을 넘어서」, 『지역과 세계』 46권 3호, 2022.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다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개시되며 급여는 현금 급여의 형태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시간적 단절이 강하게 존재하며 연금 급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할 경우 현재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다.

의료의 경우, 납부액과 급여액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 부담자와 수급자의 경계가 암묵적으로 존재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도 노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30~40대의 경우도 자신의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심한 질병에 걸릴 경우 막대한 의료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에 대한 지지는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업과 관련된 급여의 경우 노동 여부와 관련이 되므로 근로세대의 이익과 직결된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고령세대의 경우 실업 관련 복지의 혜택과 무관하다. 그렇지만 실업과 관련된 복지 태도는 단순한 연령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위험이나 참여 이력과 직결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저숙련 노동자들은 기술변화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해고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력이 길고 급여가 높은 경우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업과 관련된 복지 혜택에 대한 태도는 고령자 대 근로세대뿐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의 차이가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의 경우 일차적으로 젊은 층의 관심 영역이다. 20대의 경우 자신이 대학이나 직업교육의 직접적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30~40대의 경우 자녀가 공교육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청년층은 노년층에 비해 교육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의 경우 사회 전체를 지지하는 숙련노동을 육성하는 공공재적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령층 역시 교육 지출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 태도를 보이

지는 않을 것이다.

3.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본 논문은 2016년 국제사회조사(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이하 ISSP) 중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 부분 자료를 활용하였다. ISSP는 1985년부터 시민권, 불평등, 환경 등 다양한 사회과학 주제에 대한 연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간 협업 프로그램이다. 위 조사 중 일본에 대한 조사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NHK 방송 문화연구소 여론조사부(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에 의해 실시되었다. 일본 전국적으로 2단계 무작위 층화방식으로 16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2,400명의 샘플을 추출한 뒤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1,611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다. 복지-조세 태도에 대한 일본의 연구에는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복지 태도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는 연금과 의료에 더 관심을 둘 것이고 청년층은 교육과 실업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ISSP 자료 중 정부의 역할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영역별 복지태도의 차이를 분석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세대별로 복지태도를 비교하고자 하며 이 중에서도 의료, 교육, 연금, 실업 등 4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이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질문지는

〈표 2〉 각 영역별 복지 선호 응답 비교

응답 \ 영역	보건의료	교육	고령자 연금	실업수당
축소 지지	3.1%	1.2%	4.4%	7.3%
축소 약간 지지	6.3%	2.8%	7.3%	13.6%
중립	35.7%	37.7%	42.2%	57.5%
증가 약간 지지	32.1%	33.7%	27.2%	14.0%
증가 지지	22.9%	24.6%	18.9%	7.6%
유효한 관측치(N)	1,457	1,445	1,421	1,342
평균	3.65	3.78	3.49	3.01
표준편차	1.00	0.89	1.02	0.93

〈표 3〉 설문 응답자의 연령별 비율

	16~29세	30대	40대	50대	60~74세	75세 이상
비율(%)	13.1	12.3	19.1	15.2	28.2	12.1
관찰 수(N)	211	198	308	244	455	195

당신은 다음 “분야의 정부지출은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였다. 보건·의료, 교육, 고령자 연금, 실업수당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어느 쪽인가 하면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지금 상태로 좋다’, ‘어느 쪽인가 하면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 등 5단계로 각각 답하게 하였고 이를 증가를 원할수록 점수가 커지도록 1~5점까지 역코딩하였다. 위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교육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보건의료, 고령자 연금, 실업수당 순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세대별 복지선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는 연령 혹은 세대다. 엄밀하게 단카이 세대·밀레니엄 세대와 같이 연령과 세대는 구분이 되는 개념으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추적이 필요하다.²⁰ 여기서는 특정 시점만을 선택하며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별 집단을 세대로 정의하도록 한다. 세대별로 그룹을 짓지 않고 단순히 연령을 나열하였을 때 조사자의 평균연령은 52.6세이며 표준편차는 18.5세였고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16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96세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서는 20년씩을 경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세대별 차이를 좀 더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10년을 경계로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노령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75세를 경계로 하여 활동이 줄어들고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서도 후기고령자로 별도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75세를 경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16~19세의 그룹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20대에 편입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3) 통제변수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성별, 소득 등 사회경제적 변수 등 주요한 통제변수를 선별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소로 성별을 통제하였다. 사회정책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본 조사에서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49.5%, 여성은 50.5%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수준은 복지정책에 대해 양가적 특징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전체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우호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조(自助)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하여 복지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본 조사는 교육 수준을 중졸, 고등학교 재학, 고졸, 전문학교, 단기학교, 대학 재학, 대졸 이상 등 7단계로 구분하고

20 위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 김영순·노정호,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권 3호, 2017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누적된 패널데이터가 요구된다.

있으나 이를 단순화하여 고졸 이하, 준학사(associate degree), 대학 재학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고졸 이하는 전체 유효 응답자의 58.4%를 차지하였으며 준학사는 20.3%, 대학 재학 이상은 21.3%를 차지하였다.

소득 역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 내에서는 자원을 공유하므로 가구의 전체의 연소득을 조사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200만 엔 이하에서 1,500만 엔 이상까지 12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러한 단순합산 방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가구원 수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균등화소득(equivalised incom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곱근지수 방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한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에 대한 각 항목의 중간값을 취한 후 이를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나누어 주며 이 경우 숫자가 지나치게 커서 민감도가 높아지므로 로그를 취하였다. ISSP에서는 가장 소득이 작은 항목은 16만 엔으로, 가장 큰 항목의 값은 2,000만 엔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도 이를 따랐다. 평균화하기 이전의 가구원 전체 연소득의 평균치는 564만 2,150엔이었으며 표준편차는 392만 8,810엔이었다. 가구원 수의 경우 평균 3.19명 표준편차는 1.59로 조사되었다. 제곱근방식의 균등화소득의 평균값은 323만 3,499엔, 표준편차는 217만 2,676엔이었고 최종적으로 균등화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치는 14.78, 표준편차 0.68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낸다면 주관적인 계층의식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본인을 사회집단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고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점에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1단계의 가장 낮은 위치부터 10단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총 10단계로 설정하여 질문하였다. 이를 다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하층 25%, 중층 42%, 상층 29%가 되도록 하였다. 노동시장 참여 여부 역시 납세 등과 관련이 되므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설문에서는 고용 및 자영업

등 유급노동, 가사, 은퇴, 구직활동, 학업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질문하였으나 여기서는 유급노동 여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무방하므로 유급노동과 아닌 형태 이분형 변수로 취급하였다. 유효한 응답자 중 59.8%가 유급노동을 하고 있었고 아닌 경우는 40.2%에 해당되었다.

한편, 정부 신뢰가 높은 경우 복지에 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지출한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부신뢰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없어 나라의 공무원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로 계산하였다. 평등지향성이 높을수록 모든 복지 수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 차이를 보고자 하므로 연령에 따른 영역별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평등지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평등지향성을 확인하였다.

4. 분석 결과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의료, 연금, 교육, 실업 등 각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 태도가 연령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의료, 연금, 교육, 실업 등 각 영역에 대한 지지 정도를 5단계의 순서형 척도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인 연령의 효과를 살펴보자. 예상과 유사하게 연금과 실업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의료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연금의 경우 50대를 기점으로 젊은 세대와의 선호도에서 상당

〈표 4〉 각 영역별 복지선호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영역		연금	의료	실업	교육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남성(여성)		0.047 (0.120)	0.212 (0.117)	-0.248 (0.128)	0.004 (0.118)
교육 (고졸이하)	준학사	0.124 (0.152)	0.282 (0.148)	0.275 (0.166)	0.214 (0.153)
	학사 이상	-0.330* (0.156)	0.171 (0.153)	-0.136 (0.160)	0.448** (0.150)
연령 (20대)	30대	0.074 (0.254)	0.262 (0.235)	-0.676** (0.260)	0.404 (0.239)
	40대	0.398 (0.228)	-0.103 (0.213)	-0.871*** (0.233)	-0.138 (0.212)
	50대	0.823*** (0.232)	0.130 (0.219)	-0.545* (0.238)	-0.279 (0.218)
	60~74세	0.970*** (0.214)	-0.099 (0.198)	-0.560** (0.216)	-0.153 (0.198)
	75세 이상	0.721** (0.256)	-0.312 (0.248)	-0.816** (0.279)	-0.298 (0.249)
균등화소득		-0.140 (0.099)	0.032 (0.099)	-0.396*** (0.108)	0.233* (0.099)
주관적 계층 (하층)	중층	-0.160 (0.151)	0.182 (0.146)	0.075 (0.165)	0.111 (0.149)
	상층	-0.413* (0.171)	-0.134 (0.165)	-0.061 (0.186)	0.080 (0.169)
노동시장 참여		-0.292* (0.143)	-0.128 (0.140)	0.046 (0.153)	-0.156 (0.139)
신뢰		0.026 (0.051)	0.009 (0.050)	0.123* (0.055)	0.156** (0.050)
평등지향성		0.362*** (0.060)	0.364*** (0.058)	0.498*** (0.064)	0.239*** (0.058)
observation N		1,081	1,102	1,038	1,093
PseudoR2(McFadden)		0.0454	0.0202	0.0471	0.0217
AIC		2844.3	2957.3	2500.3	2656.0
BIC		2934.0	3047.3	2589.3	2745.9

* $p < 0.05$, ** $p < 0.01$, *** $p < 0.001$ / (): 기준

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에 비해 50대는 고령자 연금 복지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128%, 60~74세는 164% 증가하였고 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P<.001$). 75세 이상은 106% 증가하였고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1$). 60대 이상은 이미 퇴직하여 연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으며 50대 역시 퇴직이 임박하여 노후준비에 큰 관심을 보이는 세대이므로 연금 복지 확대를 강하게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40대는 아직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신의 커리어나 자녀교육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시기다. 또한, 자신이 수급자가 되는 시점과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혜택을 확대하여도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20대와의 연금 확대 지지에 대한 선호도 차이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던 실업과 교육 중에서는 실업급여에서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업급여에 대해 근로세대와 은퇴세대의 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20대와 그 외 세대 간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났다. 특히 40대는 전(全) 연령 집단 중에서 실업급여 확대를 가장 적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40대는 실업 관련 복지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58%로 감소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P<.001$). 60~74세 이상의 그룹의 경우 20대에 비해 실업 관련 복지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43%로 감소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20대와 40대의 선호 차이는 현재 일본의 실업수당 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 역시 가입기간에 비례하며 현재 나이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45~59세 사이인 그룹은 고용보험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33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10~20년 사이는 270일, 5~10년 가입한 경우 150일까지 지급된다. 실제로 2016년 기준 45~49세의 평균근속년수는 17.4년이며 50~54세는 20.6년에 달한다. 반면 현재 29세 미만인 경우는 가입기간이 평균 10년이 되지 않으며 5~10년 구간의 경우 120일, 1~5년 구간은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²¹ 또한, 실업급여의 액수 역시 기본적으로 자신의

급여에 비례하므로 40~50대 그룹에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노동시장의 완전실업률²² 역시 조사가 실시된 2016년 기준으로 25~34세 그룹은 4.3%에 달하지만 45~54세 그룹은 2.5%에 불과하다.

의료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의료의 경우 노령세대가 가장 큰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현금급여의 성격이 아닌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전 세대에 걸쳐 존재하며 일본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 체제에 대한 지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교육의 경우 역시 젊은 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지금의 노령세대 역시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은 세대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피드백이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육의 혜택은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역시 넓다.

2) 통제변수

한편,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살펴보자. 평등지향성의 경우는 예상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선호도 차이를 보고자 하므로 일반적인 평등지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성별의 경우는 복지선호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연금과 관련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고졸 이하에 비해 연금 증가를 덜 선호하였으며 반대로 교육 예산확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연금 외 다양한 사적연금을 보유하여 공적연금 지지가 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 관련하여 정책피드백 효과로 자신도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신분이동을 이루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 선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21 일본노동연구원수거홈페이지,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303_02.html (최종검색일: 2022. 10. 8.).

22 주당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만 실업자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본의 실업률 통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가구원 균등화 소득이 높을수록 실업급여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졌으며 이 차이는 로그 처리를 하였음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P<.001$). 연금, 의료, 교육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지만 실업급여는 대체로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에서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교육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약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는 연금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로여부와 관련하여 연금 영역에서만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근로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금 복지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25% 감소하였다($P<.05$). 이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主婦) 등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 등을 통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신뢰의 경우 실업과 교육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국가기구 신뢰와 관련하여 교육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의료 영역에서 국민들은 국가기구보다는 의사 등 의료공급자 집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은 현금급여가 아닌 사회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고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서비스를 전달하는 교사의 자질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5. 논의 및 연구의 함의

그동안 일본에서 복지국가와 연령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규범적인 성격을 가져왔다.²³ 많은 연구들은 경제학적 분석에 입각해 부담과 균형이 비례적이지 않은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

23 北岡伸一·田中愛治, 『年金改革の政治経済学: 世代間格差を超えて』, 東洋経済新報社, 2005.

과 균형을 공정히 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을 내놓는 연구들이 많았다. 노인 세대가 부담보다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실버 민주주의의 존재가 고령자 우대 정책을 유지 혹은 강화시켜 세대 간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이론적 논의를 별다른 검증 없이 바로 일본에 대입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세대 간 선호도의 차이나 갈등의 정도를 엄밀히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 4가지 영역에서 복지태도를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2016년 ISSP 데이터를 활용하여 4가지 영역에 대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금의 경우 50대를 경계로 하여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업의 경우 20대와 40~50대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금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와 납부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현금 형태로 운영되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성숙된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유사하다.

반면,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대와 그 밖의 연령집단 간 선호도 차이가 매우 컸다. 실업과 관련한 국제적 비교연구에서 조사마다 조사 국가와 상황에 따라 연령별 선호도의 변화가 매우 컸으며 위 결과는 일본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20대는 다른 연령 그룹에 비해 실업률이 더 높지만 실업급여 지급 액수나 지급 기간에서 더 적은 혜택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관련이 된다. <표 5> 및 <표 6>과 같이 일본의 실업수당은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하여 보장이 설계되어 있다. <표 5>는 회사의 도산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실직자의 경우이며 <표 6>은 그 외의 자발적인 실직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노동시간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역시 연령별로 차이가 크다. <표 7>과 같이 본 조사가 실시된 시점에 가까운 2014년과 2015년 24세 이하의 완전 실업률은 각각 6.3%와 5.5%로 45~54세의 3.0%와 2.8%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 일본의 실업급여 지급일자(도산·해고의 경우)

연령 \ 피보험자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80일	-
30~34세		90일	180일	210일	240일
35~44세		90일	180일	240일	270일
45~59세		180일	240일	270일	330일
60~64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출처: 棕野美智子·田中耕太郎, 『はじめての社会保障』 第10版, 196쪽.

〈표 6〉 일본의 실업급여 지급일자(도산·해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피보험자 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일반피보험자	90일	120일	150일

출처: 棕野美智子·田中耕太郎, 『はじめての社会保障』 第10版, 196쪽.

한편, 교육과 의료의 경우 별다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료와 교육의 경우 사회 전체가 고르게 편익을 누리는 특성이 있어서 세대 간 선호도의 차이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과 실업 영역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교육지출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는 오히려 교육 수준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 영역은 가구별 균등화소득의 수준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연금 영역을 제외한다면 실버 민주주의론이 주장하는 근로세대와 은퇴세대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연금 영역에서는 실버 민주주의론의 예측과 같이 연령 간 대립구도가 뚜렷이 나타난 점에서 향후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세대 간 갈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

〈표 7〉 연령별 완전실업률 추이(단위: %)

연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합계
2012	8.1	5.5	4.1	3.3	4.1	2.3	4.3
2013	6.9	5.3	3.8	3.3	3.7	2.3	4.0
2014	6.3	4.6	3.4	3.0	3.2	2.2	3.6
2015	5.5	4.6	3.1	2.8	3.1	2.0	3.4
2016	5.1	4.3	2.9	2.5	2.9	1.9	3.1
2017	4.6	3.7	2.6	2.4	2.7	1.8	2.8
2018	3.6	3.4	2.2	2.0	2.3	1.5	2.4
2019	3.8	3.2	2.2	2.0	2.1	1.5	2.4
2020	4.6	3.9	2.5	2.3	2.6	1.7	2.8

출처: 노동행정연구·연구기구(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303_02.html(최종 검색일: 2022. 11. 28.)).

장 체제 개혁에 실패하면서 재정적자와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문제들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일본이 직면한 문제들은 여러 선진국이 점차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며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또한, 복지제도를 둘러싼 중요한 다른 요소들 역시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복지국가는 성숙기에 다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히려 한국은 복지체제나 사회경제 시스템이 일본과 가장 유사하므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자: 2022. 10. 19. | 심사완료일자: 2022. 11. 13. | 게재확정일자: 2022. 12. 23.

색일: 2022. 10. 11.).

国土交通省, 「建築着工統計調査報告」, https://www.mlit.go.jp/sogoseisaku/jouhouka/sosei_jouhouka_tk4_000002.html(최종검색일: 2022. 10. 6.).

国土交通省, 「都市緑地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https://www.mlit.go.jp/toshi/park/toshi_parkgreen_tk_000073.html(최종검색일: 2022. 9. 27.).

国土交通省, 「住宅着工統計」, https://www.mlit.go.jp/report/press/joho04_hh_000960.html(최종검색일: 2022. 10. 5.).

国土交通省, 「土地白書」, <https://www.mlit.go.jp/statistics/file000006.html>(최종검색일: 2022. 9. 7.).

国土交通省, 「所有者不明土地の実態把握の状況について」, <https://www.mlit.go.jp/common/001201304.pdf>(최종검색일: 2022. 9. 5.).

農林水産省, 「農地の権利移動・借賃等調査」, https://www.maff.go.jp/j/tokei/kouhyou/nouti_kenri/index.html(최종검색일: 2022. 10. 5.).

法務省 法制審議会・民法・不動産登記法部会, 「民法・不動産登記法の改正に当たっての検討課題」, <https://www.moj.go.jp/content/001289331.pdf>(최종검색일: 2022. 9. 14.).

法務省, 「相続等により取得した土地所有権の国庫への帰属に関する法律(令和3年法律第25号)」, <https://www.moj.go.jp/content/001347359.pdf>(최종검색일: 2022. 9. 27.).

総務省 統計局, 「住宅・土地統計調査」, <https://www.stat.go.jp/data/jyutaku/index.html>(최종검색일: 2022. 10. 5.).

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 김성조

김영준·노정호,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권 3호, 2017.

김성조, 「일본 소비세 인상과 세대, 계층의 정치경제: 실버 민주주의론을 넘어서」, 『지역과 세계』 46권 3호, 2022.

오사와 마리, 김영 옮김,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 후마니타스, 2009.

이현출, 「인구의 정치학: 실버 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간 정의」,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2018.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옮김, 『복지정치: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논형, 2011.

埋橋孝文, 『福祉政策の国際動向と日本の選択: ポスト「三つの世界」論』, 法律文化社, 2011.

衛藤幹子, 「高齢化の政治」, 新川敏光 編, 『日本・韓国: 世界政治叢書』, ミネルヴァ書房, 2008.

北岡伸一·田中愛治, 『年金改革の政治経済学: 世代間格差を超えて』, 東洋経済新報社, 2005.

棕野美智子·田中耕太郎, 『はじめての社会保障』 第10版, 有斐閣, 2013.

島澤諭, 「消費増税に反対するのは誰か?: シルバーデモクラシー論を超えて」, *PHP Policy Review* 12卷 76号, 2018.

八代尚宏, 『シルバー民主主義: 高齢者優遇をどう克服するか』, 中央公論新社, 2016.

八代尚宏·島澤諭·豊田奈穂, 『社会保障制度を通じた世代間利害対立の克服: シルバー民主主義を超えて』, NIRA モノグラフシリーズ, 2012.

Boling, Patricia, *The Politics of Work-Family Policies: Comparing Japa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Busemeyer, M, A. Goerres, and S. Weschle,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ve Spending in an Era

- of Demographic Ageing: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Income in 14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2009.
- Estevez-Abe, Margarita,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Goerres, Achim,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Ageing Europ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9.
- Kitschelt, Herbert and Philipp Rehm, "New Social Risk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K. Armingeon and G. Bonoli,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London: Routledge, 2006.
- Lynch, Julia, *Age in the Welfare State: The Origins of Social Spending on Pensioners, Workers and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Political Economic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 Pettersen, Per A.,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1), 2001.
- Rhodebeck, Laurie A., "The Politics of Greed? Political Preferenc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Politics* 55(2), 1993.
- Sabbagh, Clara and Pieter Vanhuyse, "Intergenerational Justice Perceptions and the Role of Welfare Regim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Administration & Society* 42(6), 2011.
- Tepe, Markus and Pieter Vanhuyse, "Are Aging OECD Welfare States on the Path to Gerontocracy?," *Journal of Public Policy* 29(1), 2009.
- Tepe, Markus and Pieter Vanhuyse, "Elderly Bias, New Social Risks, and Social Spending: Change and Timing in Eight Programs across Four Worlds of Welfare, 1980~2003,"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3), 2010.
- Vanhuyse, Pieter and A. Goerres, eds, *Ageing Populations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Studies of Policies and Politics*, Abingdon: Routledge, 2012.
- 노동행정연구·연수기구(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303_02.html, 최종검색일: 2022. 11. 28.).

고령화사회 일본과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유대: 〈뿔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진

〈기본자료〉

- 마치다 카유, 『마키와 마미: 상사가 쇠퇴 장르의 오타쿠 동료였던 이야기』 2권, 프레지에, 2020.
- 사나다 츠루, 선정우 옮김, 『동인녀의 감정』, 길찾기, 2022.
- 鶴谷香央理, 『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 KADOKAWA, 2018.
- 鶴谷香央理, 『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 KADOKAWA, 2019.
- 鶴谷香央理, 『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 KADOKAWA, 2020.
- 鶴谷香央理, 『メタモルフォーゼの縁側』, KADOKAWA, 2021.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노인 빈곤·자살률 OECD 1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농담이 현실이

이 가족이 안락사를 의식하게 되는 계기는 신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장려하는 W·W·C(Welcome Wagon Company)라는 신종교다. 노부부는 안락사를 인정해 주는 종교라는 점에 이끌려 신종교에 가입하고, 아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노부모가 안락사를 해주기를 바란 나머지 가입을 묵인한다. 그러나 결국 안락사는 가족에 의한 개호살인의 형태로 실현된다.

일본의 안락사 논의는 주로 법과 의료의 영역에서 연명치료의 거부 및 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숙가족』의 안락사는 치매 환자의 적극적 안락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치매 환자의 경우 안락사의 중요 요건인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명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숙가족』에서 안락사는 다른 가족들이 치매 환자의 부탁을 구실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경멸과 두려움을 투사함으로써 살인에 이른다. 『노숙가족』이 묘사하는 이와 같은 안락사의 표상은 1980년대의 일본사회보다도 현재 한일 양국의 대중에게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안락사, 개호살인, 노년문학, 사에 슈이치, 치매

초고령사회 일본의 방치부동산 발생 원인과 과제: 소유자불명 토지와 빈집 문제를 중심으로 | 이호상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치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치부동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빈집과 소유자불명 토지를 사례로 부동산 관련 법제도가 고령사회의 토지이용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빈집이나 소유자불명 토지 등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 저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나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의 토지정책, 주택정책, 세제정책, 농지정책 등 부동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상속미등기, 사망자과세, 절세를 위한 농지전용 및 상속대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성장 및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실되는 등 일본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방치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일본 정부는 빈집대책법, 소유자불명토지법, 토지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등 다양한 토지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나 법리적 한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방치부동산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라기보다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만을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개발 시대에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기존의 각종 규제와 세제를 사회변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방치부동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지방창생이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방치부동산, 빈집, 소유자불명 토지, 상속미등기, 상속대책, 고령화

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 김성조

본 연구는 일본 고령자 복지국가의 편향성과 관련하여 연령별로 복지 영역의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소위 ‘실버 민주주의론’(Silver Democracy)의 논리적이고 미시적 논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세대 간 복지 균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복지정책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은퇴세대 대 근로세대의 정치적 대결을 초래

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간이 되는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조사된 국제사회조사(ISSP) 중 정부의 역할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 4가지 이슈 영역에서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금에서는 50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업에서는 20대와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선호도 차이가 드러났다. 의료와 교육 영역에서는 연령 간 정책선호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실버 민주주의론의 주장보다 세대 간 선호도 차이는 적고 선호도 차이의 구도 역시 예상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20대와 다른 집단 간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연금 영역에서는 실버 민주주의론의 예측과 같이 연령 간 대립구도가 나타난 점에서 향후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제어: 실버 민주주의, 고령화, 국제사회조사, 고령자 편향성, 복지 태도

고령화사회 일본과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유대: <뿔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진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사회 일본을 배경으로 75세 할머니와 17세 여고생의 보이즈러브(BL)를 통한 우정을 그린 여성만화 <뿔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쓰루타니 가오리, 2017~2020)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첫째,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삶과 그 배경으로서 오타쿠/후조시의 고령화라는 일본 사회의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고, 둘째, 캐릭터와 서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인 동시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으로서 BL만화라는 미디어와 그것이 매개하는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연대를 여성들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뿔마루>는 표면적으로는 여성노인과 여고생의 만남과 이들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를 고령화사회 일본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린 만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매개한 BL은 여성의 성적 욕망 및 판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교류가 가능하게 된 조건이 궁극적으로 BL을 통해 표출되고 충족되는 여성의 욕망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주인공들이 이 58세의 연령차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을 맺는 과정은 만화 속 BL만화에서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과 병치됨으로써 주인공과 만화 속 만화의 작가가 직접적으로, 나아가 간접적으로 형성하는 호모소셜한 유대가 BL에서 그려지는 남성캐릭터들 간의 진정한 사랑만큼 절실한 것이며, 동등한 가치와 깊이를 지닌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오타쿠/후조시의 고령화를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를 배경으로 BL이 구현하는 ‘기적의 사랑’과 짝을 이루는 ‘기적의 유대’, 즉 후조시들의 호모소셜한 유대에 대한 “현실로서의 판타지”이자 “판타지로서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주제어: 고령화사회, 보이즈러브(BL), 후조시, 호모소셜, 욕망의 삼각형, 판타지

연구논단

스즈키 하루노부의 <곤레이 니시키 미사오 구루마>와 에도 중기 결혼 풍속의 소비문화적 특징 | 김정희

1769년경 제작된 스즈키 하루노부(鈴木春信)의 <곤레이 니시키 미사오 구루마>(婚礼錦貞女車)(이

Ownership Act, Basic Land A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but opinions pointing out problems such as their effectiveness and legal limitations are being raised. Rather than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s to fundamentally solve the causes of occurrence of abandoned properties, the enactment and revisions of laws to respond only to the parts pointed out as ‘problems’ are fragmentarily carried out. Various existing regulations and tax systems created to regulate indiscriminate land development in the era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should be reorganized comprehensively to correspond to social changes, and regions with many abandoned properties should be approached with bold deregul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local regeneration or regional revitalization.

• **Keywords:** abandoned property, vacant house, land with unknown owners, unregistered inheritance, inheritance measures, population aging

Intergenerational Politics of Japan in an Aging Society: A Comparison of Welfare Attitudes Across Policy Fields | KIM Seongjo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compare the preference of different age groups in the welfare sector in relation to Japan's bias towards the elderly welfare state. This study aims to verify experientially the logical and microscopic reasonings of the so-called “silver democracy” and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ntergenerational political tensions on the welfare state. In Japan, it is often claimed that welfare benefits are biased toward the elderly, who account for the majority of voters, and that this leads to a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retired and the working generation.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welfare preferences between generations were investigated in four areas of issue—pension, medical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by using the ISSP survey conducted in 2016. With regard to pens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age group of the 50s or older and of younger generations. In unemployment, in contra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20s and other age groups. In the areas of health care and education, no difference in policy preferences between age groups was observed. As such,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preference were not as great as asserted by the silver democracy theory except in the area of pens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se differences was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 **Keywords:** silver democracy, population aging, ISSP, elderly bias, welfare attitudes

Depicting Fujoshi's Homosocial Solidarity in the Aging Japanese Society: Focusing on the Case of *BL Metamorphosis* | KIM Hyojin

In this paper, I analyze *BL Metamorphosis* (Tsurutani Kaori, 2017-2020), a series of women's comics on a friendship between a 75-year-old woman and a 17-year-old high school girl formed through boy's love (BL) comics set in the aging Japanese society. First, I elucidate the social reality of the aging otaku/fujoshi as the background of the life of the elderly depicted in this work.